

식민지와 과학, 그 형용 모순의 관계를 넘어서기

정준영 (객원 편집인)†

‘식민지 과학(colonial science)’. 요즘은 많이 익숙해진 듯하지만, 찬찬히 따져 보면 새삼 기묘한 느낌이 드는 조어(造語)이다. 통상적으로 ‘과학’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중립적인 지식 체계 혹은 이런 지식 생산을 지향하는 행위들 및 그 결과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반면, ‘식민지’라는 수식 어구는 인종적 지배를 공통의 특징으로 하는 특정한 시대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식민지 과학’이란 말 속에서 특수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을 수식하고, 가치중립적인 것을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형용 모순’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식민지 과학을 과학사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런 형용 모순을 해명하는데 집중해왔다. 식민지적인 특수 상황이 보편성을 지향하는 과학 활동에 어떻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를 밝히는 연구.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과학 지식이 어떻게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비판. 이런 작업의 배후에는 식민지적 상황을 극복하는 힘, 사회를 문명화시키는 ‘진보’의 힘으로서 과학에 대한 신뢰 혹은 신화가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실증적 연구를 통한 해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식민지 과학이 대문자 ‘과학(Science)’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할 파생적 범주(category)로 남아있다는 느낌은 여전히 지우기 어렵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felix11@snu.ac.kr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사학계의 내부에도 근대 과학의 문제를 단순히 보편적이고 단일한 지식 체계의 집적이라는 ‘큰 그림(the big picture)’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의 질문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과학 활동 및 그것에 의해 구축된 지식 체계가 결코 이를 창출한 시공간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과학 활동의 중심부-주변부 관계가 누구에게나 자명한 과학적 진리의 전과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도 이런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과학사 연구들이 속속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식민지 과학’ 문제에 한정해 보아도, 이런 문제 제기는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지는데, ‘식민지’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형용 모순’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와 과학이 특수-보편의 도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라면, ‘식민지에서 과학하기’ 또는 ‘식민지적으로 과학하기’란 도대체 어떤 사태를 지칭하는 것일까? 과학하기의 결여와 배제가 특징적이라 할 식민지 사회에서 과학 말하기가 오히려 과잉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에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때로는 사회의 혁명을 꿈꾸는 이 복잡한 화용론(話用論)의 정치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보편과 가치중립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배와 저항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과학하기 또는 과학자 되기의 장(場, field)은 어떻게 제도화되며 식민지 행위자들은 이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과학하기를 ‘전략적으로’ 수행하는가?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은 고정된 범주처럼 생각해왔던 ‘과학(제도)’의 확고한 경계선들을 흐트러뜨리며, 식민지(성)와 과학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기존의 한국 근대 과학사 연구의 방법과 성과를 전유(專有)하면서도, 과학의 내부와 외부를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지점에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과학사 영역 밖에서 과학사의 주제들, 특히 식민 과학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학과와 역사학, 사회사 분야에서는 한국의 근대 형성 과정에서 ‘과학 수용’에 걸었던 특별한 사회적 기대에 주목하고, 그 전개 양상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미약하게나마 생겨나고 있다. ‘과학하기’ 자체보다는 ‘과학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 시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과학의 결여가 사회의 정체(停滯)와 식민화의 운명을 초래했다고 믿었던 식민지 사회에서 과학이라는 말은 그저 말에 머무르지 않는 물질

성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그저 과학의 외부 효과에 관한 것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과학을 단순히 그 외부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이런 연관 속에서 과학의 경계가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윤곽을 드러내는지 그 경위를 추적할 여지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해 생각하는 고정된 분업 구조를 넘어서, 과학사 영역은 ‘과학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주변 분야와의 보다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한국 근대 사회 형성과 과학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사학회지』의 이번 기획은 이런 긴밀한 대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모은 ‘식민지 과학’에 관한 5편의 글 중에서 2편은 과학사 연구자의 신진기예가 돋보이는 글이고, 나머지 3편은 인접 분야, 즉 문학사, 사회사, 의학사 연구자가 식민지 과학 문제에 접근을 시도한 글이다. 글 중 하나는 문학사와 의학사 사이에서 시도된 공동 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기획은 취지처럼 긴밀한 대화라고 부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외부의 시도는 해당 학계에서는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연구 결과들 또한 아직 문제 제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말이 넘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과 생각을 만들고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기획이라고도 하겠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방법도, 문제도, 논리 구성도 다른 이 5편의 글을 통해서, 식민지 과학의 존재 방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다단한 양상들에 대해서 ‘징후적 독해(symptomatic reading)’의 시도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들은 식민지라는 복합적 상황에서 ‘과학하기’와 ‘과학 말하기’가 가졌던 다양한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 *

앞서도 언급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야 자본주의 세계 체계에 편입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서구에서 기원한 ‘사이언스’이라는 말의 율림은 각별한 것이었다. 한때 야만으로 폄하했던 서구 세력의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야만-문명’ 도식의 역전(逆轉)을 경험했던 이들 사회의 입장에서, 근대 과학은 역전을 초래했던 실패의 징표이면서 동시에 이런 실패를 만회(挽回)할 희망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사회에서 과학하기의 실체가 어떠했는지와는 별개로, ‘과학 말하기’ 자체가 정언명령과 같은 권한을 가졌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특히 식민지로 전락하여 ‘과학하기’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과학 말하기’는 근대 사회가 되는데 실패했던 민족과 사회의 기구한 운명을 아프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과 ‘진보’를 꿈꿀 수 있는 원천이었다. 특히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은 ‘과학적’ 인식이 식민지의 엄혹한 질서 뿐 아니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더 살벌한 자본주의적인 계급 질서를 파헤치는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다.

1920년대에 간행된 잡지 『신소년』에 주목하여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이 어떻게 과학적 교양을 통해 아동들을 사회주의 투사로 형질 전화(形質轉化)시키려 했는지 분석하고 있는 한민주의 글은, 식민지 과학을 둘러싸고 전개된 이처럼 복잡한 화용론의 정치학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이 글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사회주의 지식인에게 ‘근대 과학’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신화적인 존재였다. 과학은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화와 성숙을 이끄는 힘이었고, 동시에 사회주의적 혁명의 필연성을 보증해주는 마법적인 무기였다. 이들이 프롤레타리아 아동에 일찍부터 주목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 의미심장하다. 이중적으로 ‘미숙’한 존재인 소년들이 혁명 전사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과학과 사회주의는 서로를 지지하며 혼종(混種)해가기 때문이다. 과학은 사회주의적 필연성을 보장하며, 사회주의는 과학을 협소한 자연의 영역을 넘어서게 만들어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것’으로 현현(顯現)시킨다. ‘신화’를 타파하는 지식이어야 할 사회주의는 과학을 극한에까지 ‘신화화’함으로써 현실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프롤레타리아 아동 문학을 통해 걸었던 꿈은, 하지만 여전히 계몽적 언설에 머물고 있다. 무산 아동들이 진짜 혁명 전사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은 단지 보급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각인되어 과학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과학이 계몽의 수단, 전파의 대상을 넘어서 어떻게 식민지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체화(體化)되어 갔는지가 더불어 질문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흥미를 끄는 글이 최은경과 이영아의 공동 작업이다. 이들은 1930년대 동아일보의 의학 상담란이었던 ‘지상 병원(紙上病院)’에 주목하여 근대 의학 지식이 당시 식민지 대중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갔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필자들은 이를 통해 서양 의학 지식이 어떻게 식민지 대중의 일상적 상식으로 정착해 가

는지 그 헤게모니화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흥미를 끄는 것은 의학 상담이라는 형식 자체이다. 이 상담은 식민지 대중들에게 자신의 신체 내면에서 내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징후, 증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면(紙面)의 한계 등을 이유로 서양 의학의 지식 체계를 스스로 동원해서 자신의 증상과 질병을 ‘설명’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양 의학의 틀 속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대중적 용어를 둘러싸고 상담자와 ‘고문 의사’ 사이에서 전개된, 교묘한 번역과 재번역의 과정이 존재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서양 의학의 대중적 보급 수준을 재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 이런 의학적 고백의 장치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엄연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근대 의학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이런 시선 속에서 고백하는 장치를 통해서, 의학적 주체는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글에서는 주로 ‘과학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어떻게 과학을 계몽의 수단 혹은 고백의 수단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단순화를 무릅쓰자면, ‘야만-문명’의 도식 속에서 과학이 근대적인 주체(그것이 사회주의적 주체이건 근대 의학적 주체이건)의 창출과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공통의 논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잉된 듯 보이는 ‘과학 말하기’가 ‘과학하기’의 결여 혹은 제약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식민지에서 ‘과학하기’란 무엇이었으며, 이는 어떤 존재 조건에서 가능 또는 불가능했느냐에 대한 고찰도 여전히 중요하다. ‘중심-주변’, ‘식민 모국-식민지’라는 도식 속에서 ‘과학하기’란 어떤 정치성을 가지며 또 어떻게 제도화되는가? 이하의 글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이정의 글은 식민지 공간에서 그나마 ‘과학하기’가 가능했던 이례적인 영역인 향토 식물 연구에 주목하여, 과학 활동이 가지는 이중·삼중의 정치성을 분석한다.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과학은 계몽과 해방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식민 권력에게 과학이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였다. 특히 주변 사회에 대해서 인종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우월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일본의 경우, 문명의 척도이자 가치중립적인 과학만큼 확실한 지배의 수단도 드물었다. 제국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 구축에 집요할 정도의 집착을 드러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들에게 과학이란 식민지인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서구 열강에 대해서도 식민 지배의 객관적 능력을 입증해야 했던 주변부 제국주의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식민 권력이 식민지인들을 ‘과학하기’로부터 집요하게 배제했던 것은 당연했다. 향토 식물과 같이 과학 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식민지인들의 조력(助力)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을 따름이었다. 과학기술의 중립성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항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과학하기 또는 과학자 되기를 가능하게 한 예외적인 구실이었다. 필자는 조선의 향토 식물 연구를 둘러싸고 일본 본토의 관학자(官學者)들과 식민지 현지의 일본인 박물 교사들, 그리고 이들을 도우며 연구자로 성장한 조선인 독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된 정치성을 탐색한다. 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과학 활동의 협력이라는 장(場)으로 이끈 것은 묘하게도 ‘향토’라는 개념이 가진 중층적 성격이었다. ‘향토’는 식민지인 과학자들에게는 일본과는 다른 ‘조선적인 것’을 꿈꾸고 지향할 수 있었던 근거였지만, 일본인 과학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조 일본인 박물 교사들은 일본 본토의 지방적 확장으로만 이해하는 중심부 과학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본토가 아니라 ‘제국’의 관점에서 향토의 ‘현상성’을 강조하는 ‘크리올(creole)화’된 이들의 ‘조선화’는 식민지인 독학자들과는 물론, 일본 본토의 관학자들과도 차별화되는 측면이었다. 결국 향토 식물을 둘러싸고 전개된 독특한 과학하기의 지형은 중층적인 의미를 가진 ‘향토’ 개념과 과학의 중립성을 가운데에 두고 식민지 행위자들이 나뉘는 활동을 펼쳐던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장이었다. 재조 일본인은 물론 식민지 조선인들마저도 향토, 즉 ‘로컬’의 개별성이란 것이 결국에는 다양성을 포괄한 제국적 질서의 구현에 수렴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물론 과학하기의 정치성 혹은 식민성은 식민지의 ‘로컬’한 성격을 제국의 위계 속에 배치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제국 중심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철저히 이식하는 과정 속에서도 식민지 특유의 정치성은 포착될 수 있다. 정준영은 1941년 설립된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주목하여, ‘로컬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1930년대와는 상이했던 과학하기 혹은 과학자 되기의 지형을 탐색한다. 경성제대가 이공학부의 설립을 모색했던 시기는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이 급격하게 전시 동원 체제로 돌입해갔던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애초부터 이공학부는 식민지 조선의 ‘로컬’한 이해관계

와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제국 전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국 중심부의 의도 속에서 출현했다. 제국적 차원에서 조선은 전선(戰線)의 확장과 더불어, 군수 자원의 개발과 공업적 활용의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었다. 경성제대가 이농학부가 아닌 이공학부로 방향을 선회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 더욱이 경성제대는 이공학부의 창설 과정에서 철저하게 도쿄제대 이학·공학부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도쿄제대의 ‘이식’을 자초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본토 제국대학에 뒤지지 않는 학부의 규모를 갖추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식민지로서 조선이 가졌던 특수한 위상에 바탕으로 두고 ‘현지화’를 추구했던 의학부, 도쿄 지향과 조선 지향 사이에서 경합이 벌어졌던 법문학부와는 차별화된 양상이었다. 물론 경성제대는 식민지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대학이었기에 누릴 수 있었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공학부가 단순한 엔지니어 양성 기관이 아니라 기초적인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자율적인 연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자율성을 지탱해왔던 ‘대학 자치’의 전통이 이미 1930년대 말 붕괴한 상황에서 이공학부가 설립되었던 만큼, 여기에서 연구 본위의 자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각이 배제된 ‘연구 본위’와 ‘학문 봉공’의 지향은 결국에는 전시 국면에서 ‘학문’의 도구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얼핏 보기에 차별이 철폐된 듯 보이는 과학하기·과학자 되기의 동형적(同形的) 공간은 도리어 로컬적인 것을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또 다른 폭력적 공간에 다름 아니었다. 이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선인의 겉모습을 벗겨내어 강제로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과학하기의 제도적 장(場) 속에서 행위자로서 과학자가 마냥 구조적 효과의 수인(囚人)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과학자는 과학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 배운 것들을 강조하거나 누락시키며 때로는 비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 행위성은 하나의 제도적 장이 붕괴되고 새로운 기준, 이론, 제도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이전 것의 모방도, 새 것의 답습도 아닌 혼종적인 과학을 창출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환이 분석한 체질 인류학자 나세진의 사례는 식민지 과학의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글은 나세진의 체질 인류학 연구가 단순히 식민지 과학의 유산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기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과학적’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

소들이 식민 이후 새로운 과학하기의 장(場) 속에서 어떤 변모를 겪어갔는지를 추적한다. 여기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한 것이 논문의 제목이기도 한 ‘지방차(地方差)’와 ‘고립한 멘델 집단’이다. 경성제대 체질 인류학자들의 중심적인 연구 주제였던 ‘지방차’는 식민지에서 관찰되는 특수성을 제국 전체의 질서 속에서 위치 지우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에서 관찰되는 지방의 차이를 통해 조선인의 혼합적 기원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대륙에서 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일본인의 기원을 밝혀낸다는 과제로 이어졌다. 식민지 공간에서 나세진은 이러한 ‘지방차’를 규명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의학자로 성장한다. 그런데 해방 이후 나세진은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그리고 독일)을 대신해서 미국이 체질 인류학의 중심부가 되었으며, 직면한 과제 또한 지금껏 해왔던 혼합 기원이 아니라 한민족의 단일 기원을 해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세진은 단일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학계의 연구 동향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세진이 식민지 과학으로부터 배운 것을 청산하거나 미국의 연구동향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양자의 혼종과 취사선택을 통해 ‘지방차’를 ‘고립한 멘델 집단’으로 해석해내는 새로운 논리를 창출해 내었다는 것이다. 이런 나세진의 사례는 일제 시기와 해방 이후를 관통해서 활동했던 1세대 과학자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관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 과학의 유산을 단순히 청산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고, 식민 이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용, 재해석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 *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특집에 수록된 글들은 개별 연구로도 물론 흥미롭지만 과학 제도에 한정되지 않는 식민지 과학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 읽어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글의 상당수는 ‘과학(제도)’을 엄밀하게 한정할 경우 과학이라 간주될 수 없는 것들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하기의 결여·계약 속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말하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던 식민지의 현실을,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항대립의 구도로 쉽게 환원되지 않는 식민지 과학 공간의 독특한 메커

니즘과 정치성을, 그리고 이렇게 뒤엎힌 제약들 속에서도 과학하기를 모색했던 식민지 과학자(집단)의 적극적인 행위성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이 글들은 ‘식민지’와 ‘과학’은 서로를 제약하는 형용 모순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생산적 관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과학사 연구에 식민지(성)을 물음으로써, ‘보편-특수’, 과학의 ‘내부-외부’라는 고착된 틀을 넘어 끊임없이 유동하는 과학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가능성이 생길 수는 없을까? 식민지 연구에 과학(사)의 주제를 물음으로써, 현재환이 논문 말미에서 말했듯이 “한국 근현대 지식인들과 그들의 지적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한국학의 주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단순한 희망 사항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거칠고 미숙한 상태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는 시도되어야 한다. 이번 특집이 미약하나마 이런 대화의 계기 중 하나이기를 희망한다.